

재일 동포 정책에 대한 제안서

제 18 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 귀하

제 18 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하신 ○○○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곧 다가오는 12 월 19 일에 실시되는 제 18 대 대통령 선거가 일본에 사는 저희에게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일동포가 유권자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거를 앞두고, 향후 재일동포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선거 공약으로 거두어 주셔서 향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요망 항목】

1. 민족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의 확충

재일동포 아이들에 대한 민족교육은 재일동포 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일본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충분한 민족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구식민지 출신자의 자손뿐만 아니라, 신규 입국자, 국제결혼 가정, 일본국적을 가진 귀화가정의 아이들 등 민족학교, 민족학급, 지역활동등의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 니드에 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차세대 재일동포 아이들의 민족적정체성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계 민족학교 4 개교와 일본 공립학교에 개설되어있는 민족학급에 대한 지원을 꼭 확충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대우, 주민등록 제도에 대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의거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있는 국내 거소신고의 데이터가 행정 안전부, 외교 통상부 등 다른 부서에서 서로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 취학통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등 행정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금융 거래를 비롯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만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복지에서는 배제되면서 납세의 무만은 요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든,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든, 가족이나 친척, 직장 등의 생활 기반이 양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는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일제강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에 대한 대우는 이른바 자발적인 해외 이주자와 동일시되고 있고, 역사적 경위를 가진 재일동포들에게 일률적으로 권리 제한이 부과되어져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제도상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주민등록자와 마찬가지로 행정 서비스나 일상 생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중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육아 및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재외 국민이 한국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3.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에 대해

① 재일동포 고령자·장애자 무연금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은 연금 제도의 "국적 조항"이 철폐되기 이전부터 지급 대상 연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연금 상태로 방치 된 재일동포 고령자·장애인의 무연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06 년 11 월 17 일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제 32 회 한일 · 일한 의원연맹합동총회 "공동성명"에서 무연금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또한 매년 개최되는 한일 아시아 국장급 협의에서도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일의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지만, 해방 이후 일본의 차별정책하에서 시달려 온 재일동포 1 세들의 구제를 위해서 일본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② 일본의 외국인 지방 참정권 실현을 위해

이미 한국국내에서는 2006 년부터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이 부여되어 투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정부에 대해 그 실현을 촉구하는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일본국내에서 재일동포가 스스로의 민족성을 지켜나가면서, 일본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일본사회와 공생해 나감에 있어서 지방참정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③ 재일 동포의 본국 왕래에 대하여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거주하면서도 남북분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국적", "조선적"에 의해 분단되고, "조선적" 동포의 경우, 한국과의 왕래는 매우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후 "조선적"동포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 (TRAVEL CERTIFICATE)발급을 통해 한국과의 왕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세의 성묘나 고향방문, 상업 및 유학, 문화교류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적" 동포들은 한국을 왕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조선적" 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요건을 완화시키고 본국왕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요청드립니다.

4. 대외 관계

① 대북 정책에 대해

저희 재일동포는 남북분단의 비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북의 화해와 교류의 촉진, 공존과 공영, 그리고 통일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등에 인해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또한 북한의 행동이 많은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을 다시는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② 대일 정책에 대해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우방관계입니다.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중추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문화·스포츠·청소년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청산이나 독도를 둘러싼 갈등 등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양국 간의 현안이 급격히 표면 위로 나타나면서 대립이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의 우익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해결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간의 갈등의 심화는 일본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세력이 더욱 거세지고 일본에 사는 재일 동포들에 대한 공격과 배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재일동포는 한국정부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아직도 미해결의 과거청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건설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한일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며, 대일정책의 추진, 재일동포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통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제에 대해

현재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재외동포재단, 정부 각부처의 관련사업 등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사는 동포는 190 개국 이상, 750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총 인구 5000 만명 중 약 15%에 달합니다. 그리고 해외동포는 그 역사적 경과에 있어서, 거주국과의 관계 등을 봐도 매우 다양하며, 직면하고 있는 과제도 다양합니다.

동시에 이제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해외동포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재외동포와 한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과 거주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극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부 전문 부서의 창설 등 정비 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외동포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시 된 재외국민 선거 제도는 재외공관에서의 직접투표 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의사가 있으면서도, 재외공관까지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재외동포도 다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등 많은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꼭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2 년 12 월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코리아 NGO 센터
대표이사 임범부, 정갑수, 박진웅 드림

<참동인>

김석범(작가) / 김시중(시인) / 양석일(작가) / 현월(작가) / 정월선(성악가) /
이봉우(영화 프로듀서) / 김수진(배우, 연출가) / 강성(프리 라이터) /
박일(오사카시립대학교수) / 문경수(립명관대학교수) / 윤건차(카나가와대학교수)
고용수(코우난대학교수) / 배광웅(오사카교육대학교수) / 강유미(변호사) / 김봉식(변호사)
은용기(변호사) / 오행철(새이사) / 윤병태(사법서사) / 임성일(행정서사)
고동임(행정서사) / 손용(행정서사) / 강황범(재일코리안천년연합공동대표)
김성원(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관장) / 박병윤(세계 HAN 민족문제연구소소장) /
오광현(성공회이쿠노센터 총주사) / 도상태(NPO 법인 삼천리철도 이사장)
고용철(동포보호자연락회 회장) / 김신용(코배재일코리안보호자회 대표)
김수영(재일코리안 고령자,장애자 무년금소송원고단 원단장)